

4-2 보강

노직 · 롤스

1. 노직

(1) 18년 윤사 ebs 수특 170쪽

④ 국가의 재분배 정책에 대한 노직의 입장

- 국가의 소득 재분배 정책을 개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 여기고 반대함(단, 교정을 위한 재분배는 원칙적으로 인정함)
- 현재의 소유 상태가 정의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의로운 상태이며, 취득과 양도 과정에 문제가 없는 한 빈부 격차가 아무리 크더라도 정의로운 상태로 봄
- 국가가 부유한 사람들에게 강제로 세금을 부과하여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으며, 개인의 자발적인 자선 행위를 소유권을 행사하는 훌륭한 방식으로 권장함

(2) 소유 권리론의 시점에서 볼 때 재분배는, 실제 개인들의 권리의 침해를 포함하므로, 정말로 심각한 문제이다(부정의의 교정의 원리에 따라 생기는 재분배는 예외이다).

-노직,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 남경희(역), 214쪽, 1983

(3) 하지만 통상적인 국가 개념에 따르면, 국가의 지리적 경계 안(또는 심지어 가끔 밖으로 여행하는 경우에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의 보호를 받거나 적어도 받을 권리가 있다. 어떤 사인(私人)이 그러한 보호를 위한(형사들에게 봉급을 지불하고, 경찰들로 하여 범인을 감금하고, 법정에 서게 하고, 징역을 살게 만들도록 봉급을 지불하기 위한) 비용을 치를 충분한 기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또는 국가가 이러한 비용들을 치르는 대신 어떤 봉사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그와 같이 폭넓은 보호를 제공하는 국가는 재분배적이라 생각할 수 있다. 이런 국가는 일부의 사람들이 보다 많이 지불하여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보호받게 하는 국가이다. 그리고 주류의 정치 이론가들에 의해 진지하게 논의된 극도의 최소 국가, 즉 고전적인 자유주의 이론에서 운위되는 야경(夜警)국가는 이런 식으로 재분배적인 것처럼 보인다.

-같은 책, 48쪽

(4) 최소 국가는 극소 국가에, 조세 수입으로 재정 지원을 받는 명백히 재분배적인 프리드먼(Friedman)식의 보증서 제도가 덧붙여진 국가이다.

-같은 책, 49쪽

2. 롤스

(1) 재산 소유적 민주주의의 이념:미드와 롤즈의 비교

롤즈(1921~2002)의 정의론은 분배 이론적 측면에서 재산 소유적 민주주의(property-owning democracy)를 이상으로 하는 경제체제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론은 복지 국가적 자본주의를 강력히 옹호하는 이론으로 알려져 왔다. 그 이유는 롤즈가 그의 정의론 초판(1971)에서 복지 국가라는 이념과 재산 소유적 민주주의라는 이념을 보다 예리하게 구분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그래서 롤즈는 그의 이론이 복지국가적 자본주의의 옹호론이라는 오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정의론 개정판(1999)서문과 공정으로서의 정의 :재진술 (2001)에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드러낸다.

-홍성우, 범한철학 □제70집 2013년 가을, 276쪽

(2) 18년 생윤 ebs 수완 78쪽

[자료와 친해지기] 롤스의 재산 소유 민주주의

내가 수정하고 싶은 또 하나는 복지 국가라는 관념과 재산 소유 민주주의라는 관념을 더욱 예리하게 구분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관념은 서로 매우 다르다. 그러나 양자 모두 생산적 자산들에 대한 사유 재산권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양자를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잘못 생각하게 된다. 한 가지 주요한 차이점은, 재산 소유 민주주의의 배경적 제도들은 경쟁 시장 체제를 구비하고 있으면서 부 및 자본 소유의 분산을 시도하며 따라서 사회의 소수가 경제 및 간접적으로는 정치적 삶 그 자체를 통제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 재산 소유 민주주의는 각 시기의 마지막 순간에 적게 가진 사람들에게 소득을 재분배함으로써가 아니라, 말하자면 각 시기가 시작하는 순간 생산적 자산과 인간 자본(교육된 능력과 훈련된 기예)의 광범위한 소유를 보장함으로써 부의 집중을 피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평등한 기본적 자유와 공정한 기회균등을 배경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이 관념은 단순히 우연적인 사고나 불행으로 손실을 입은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시민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기 자신들의 일을 꾸려 나갈 수 있는 위치에 서게 하는 것이며, 적절히 평등한 조건하에서 상호 존중에 기초하여 사회적 협력을 지원하게 하는 것이다.

- 롤스, "정의론" -

롤스에 따르면, 복지 국가는 각 시기의 마지막 순간에 재분배를 통해 사람들이 일정 생활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우연적인 사고나 불행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을 한다. 롤스에 따르면, 이러한 복지 국가는 경제적 불평등과 이로 인한 정치적 영향력의 격차를 막지 못해 정의의 원칙을 충분히 실현할 수 없다. 그는 복지 국가의 대안으로 부의 집중을 막고 이를 바탕으로 평등한 기본적 자유와 공정한 기회균등을 실현할 수 있는 재산 소유 민주주의를 제안한다.

(3) 작년(17년) 2학기 생활과 윤리 종로 보충교재 중에서

내가 수정하고 싶은 또 하나는 복지 국가라는 관념과 재산 소유 민주주의(property-owning democracy)라는 관념을 더욱 예리하게 구분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관념들은 서로 매우 다르다. 그러나 양자 모두 생산적 자산들에 대한 사유 재산권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양자를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잘못 생각하게 된다. 한 가지 주요한 차이점은, 재산 소유 민주주의의 배경적 제도들은 (효과적인) 경쟁 시장 체계를 구비하고 있으면서 부 및 자본 소유의 분산을 시도하며 따라서 사회의 소수가 경제 및 간접적으로는 정치적 삶 그 자체를 통제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 재산 소유 민주주의는 각 시기의 마지막 순간에 적게 가진 사람들에게 소득을 재분배함으로써가 아니라, 말하자면 각 시기가 시작하는 순간 생산적 자산과 인간 자본(교육된 능력과 훈련된 기예)의 광범위한 소유를 보장함으로써 부의 집중을 피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평등한 기본적 자유와 공정한 기회의 균등을 배경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이 관념은 단순히 우연적 사고나 불행으로 손실을 입은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이것은 당연히 해야만 하는 것이다), 오히려 모든 시민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기 자신들의 일을 꾸려 나갈 수 있는 위치에 서게 하는 것이며, 적절히 평등한 조건하에서 상호 존중에 기초하여 사회적 협력을 지원하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제반 정치 제도의 목적을 바라보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입장에 주목해보자. 복지 국가에서 그 목적은 어떤 사람도 일정한 생활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안 되며, 따라서 모든 사람은 우연적인 사고나 불행으로부터 보호받아야만 한다-예를 들면 실업 보상과 의료 혜택-는 것이다. 소득의 재분배는, 각 시기의 최종 순간이 되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되었을 때, 이런 목적에 도움을 준다. 이런 체제는 차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과도한 소득 격차뿐만 아니라, (36절에서 도입한) 정치적 자유의 공정한 가치와 양립 불가능할 정도의 큰 규모의 부의 불평등이 상속되는 것까

지 허용할 수 있다. 기회의 공정한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기는 하지만, 이런 노력은 복지 국가가 허용하고 있는 부의 정치적 영향력의 격차가 발생할 경우 불충분하거나 실효성이 없다.

이와는 달리, 재산 소유 민주주의에서 목적은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 간의 장기간에 걸친 공정한 협력 체계로서 사회라는 관념을 실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본적 제도들에서는 처음부터 일부 소수의 수중에 있지 않아야 한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상속 및 증여에 대한 법률을 통해 자본과 자원의 소유를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분산시킨다는 점이다. 또한 제반 정치적 자유와 공정한 가치를 뒷받침하는 각종 제도뿐만 아니라, 교육과 훈련을 제공함으로써 보장되는 공정한 기회 균등 역시 강조되어야 한다. 차등의 원칙의 위력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차등의 원칙이 복지 국가의 맥락이 아니라 반드시 재산 소유 민주주의(혹은 자유주의적 사회주의 체제 liberal socialist regime)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만 한다. 즉 차등의 원칙은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이 여러 세대 동안 협력하는 공정한 체계로 이해되는 사회를 위한 호혜성의 원칙 내지 상호성의 원칙인 것이다.

...중략...

이제 정치관으로서,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비록 시민의 독립성과 인격의 완전성을 위한 개인 재산권은 포함하고 있지만) 생산 수단에 대한 사유 재산권이 자연권이라는 식의 주장은 전혀 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가 소유-경영하는 기업에 대한 자연권 역시 전혀 옹호하지 않는다. 그 대신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어떤 국가의 특수한 여건들이 제시되었을 때 이런 문제들이 그에 비추어 합당하게 해결될 수 있는 정의관을 제시한다.

-롤즈, “정의론” 개정판 서문 20~22쪽

(4) 존 롤스의 정의론(A Theory of Justice)으로 풀어낸 공공의료

-박형철(<http://pha.or.kr/journal/view.php?number=11>)

John Rawls는 볼티모어에서 태어나 1950년 프리스턴 대학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는다. 박흥규1)에 의하면 그의 철학은 미국형 복지정책과 관련이 깊다. 6,70년대 미국의 리버럴리즘의 사상적 기반을 닦은 학자로 당시 John F. Kennedy 대통령이나 민주당과 관련이 깊다. 80년대 레이건 대통령 당선과 함께 신자유주의가 대두되었고 당시 민주당의 진보적 자유주의 정책들을 과도한 자유, 자유의 남용이라 비판하며 복지에서의 정부 역할을 대폭 축소하였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미국의 신자유주의를 정당화하고자 하는 다양한 사상이 등장했다. 신자유주의 대두 후에도 Rawls는 민주당 좌파와 입장을 같이 하면서 복지와 평등의 실현을 강조한다. Rawls에 의하면 복지자본주의에서는 자본이 소수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공정’을 실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자본이 곧 힘이다. 이름은 ‘복지국가’이지만 결국 소수의 힘있는 이들의 영향력에 의해 정책이 결정될 소지가 크다는 의미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불평등을 바로 잡기위한 과제도 시행하기 어렵게 된다. 또 불평등이 반복된다보면 국가에 의존하는 이들이 생겨나게 되고, 시장의 경쟁원리를 통해 자원을 획득하는 이들과의 간극이 생겨 평등한 관계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Rawls는 ‘재산소유민주주의’(property-owning democracy)라는 개념을 소개한다. 앞서 언급한 복지 자본주의와는 달리 부와 자본의 소유권을 분산하여 소유하게 함으로써 힘 있는 소수가 경제적, 정치적 삶을 통제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이다. Rawls의 정의론이 흥미로운 것은 사회 구성원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을 위한 혜택을 연구하였다는 점이다.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보장하자는 것인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대 원칙이 전제되어야 한다. 하나는 기본적 자유와 권리가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것(평등의 원칙)이다. 다른 하나는 평등이 무너지는 것은 최소 수혜자에게 이익이 돌아간다는 조건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차등의 원칙)이다. 여기서 최소 수혜자는 기본재화를 가장 적게 분배받는 집단, 특히 저소득 노동자 계급의 ‘사회적 지위’를 말한다. 보건분야에 적용한다면 공공의료가 아니면 혜택을 입기 어려운 저소득층, 사회적 편견으로 오랫동안 복지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었던 이들이 그 대상이다.

(5) 존 롤즈의 정의론과 '재산소유 민주주의'론

-정태욱, 法學研究 第27卷 第3號, 2016.12, 11-41 (31 pages)

롤즈의 정의론은 현대 법철학 및 정치철학의 주요 주제이다. 롤즈 정의론은 보통 서구 복지국가에 대한 철학적 정당화로 이해되어 왔다. 하지만 롤즈 자신은 복지국가 대신 "재산소유 민주주의 (property-owning democracy)"를 제시하였다. 재산소유 민주주의의 개념은 2001년 롤즈 유고 강 의록인 『공정으로서의 정의 : 재서술』에서 정의론의 핵심으로 제시되었고, 이후 많은 후속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 학계에서 롤즈의 재산소유 민주주의 개념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 글에서는 롤즈의 『정의론』과 『공정으로서의 정의 : 재서술』을 종합하여 재산소유 민주주의의 성격과 제도적 틀을 이해해 보고자 하였다. 먼저 재산소유 민주주의의 개념사를 추적하였고, 이후 롤즈 정의론 속에서 재산소유 민주주의의 성격을 파악해 보았고, 롤즈의 관점에 따라 재산소유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적 자본주의의 차이를 규명해 보았고, 끝으로 재산소유 민주주의의 제도적 열개를 정리해 보았다. 이 글은 롤즈의 이론을 정리하고 해명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다만, 맺음말에서 현대 복지국가 사상을 소개하며, 롤즈의 재산소유 민주주의는 사실상 사회민주적 복지국가의 형태와 유사함을 지적하였다.

(6) 존 롤즈의 『정의론』 읽기, 홍성우, 세창미디어, 2015

본문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6학년도-9평-13번-선지 ⑤

☞ Zola Guide 1학기 교재에도 있음. Zola는 수업 시간에 '일부러' 언급 안 했음. 일부 반에서는 선지 ⑤를 지우고 그냥 넘어가라고 하였음.(교육과정 이탈이기 때문에)

13. 현대 사상이자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정의의 원칙은 개인이 무엇을 소유할 수 있는 정당한 자격을 유일한 근거로 한다. 정당한 자격을 가진 이들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교환하는 절차의 규칙을 위반하지만 않는다면, 어떤 사람은 부유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다는 사실이 불행일 수는 있으나 불공정하지는 않다.

을: 정의의 원칙은 권리 할당과 이익 배분의 근거 원리이다. 개인이 어떤 여건에서 태어나는 것은 정의롭지도 부정의 하지도 않은 임의적 사실이다. 이 사실을 다루는 제도가 정의로운지의 여부는 합리적 개인들이 유틸리티를 배제한 채 도출한 원칙에 의거하였는지에 달려 있다.

- ① 갑은 정의 원칙이 가상 상황에서의 합의를 통해 구성된다고 본다.
- ② 을은 평등한 기본적 자유가 공정한 재분배에 항상 앞선다고 본다.
- ③ 갑은 을과 달리 소유권이 보장되면 균등 분배가 실현된다고 본다.
- ④ 을은 갑과 달리 정의 원칙은 다수결 절차에 따라 도출된다고 본다.
- ⑤ 갑은 최소 국가를, 을은 복지 국가를 재분배의 실행 주체로 본다.